# "새로운 프로젝트 도전 과감하게"

## 김관영 도지사, "11~12월 실국별 워크숍 통해 실국장 중심으로 뭉쳐달라" 강조

## 조직개편 시행 후속조치 철저 · 도정질문답변 이행계획 마련 사후관리 당부도

국회 예산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실국장 중심의 원팀을 강조하며, 새로운 프로젝트에 과감히 도전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지사는 실국장 및 새로 임명된 과장에게 "오늘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첫 인사가 실시된 바, 새로운 마음으로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하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기민하고, 역동적이고, 소통하면서, 담대하게 일을 펼쳐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원들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 하지 않고 용기있게 도전한다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며, "11~12월중 실국별 워크숍 개최를 통해 구성원 전체가 원팀이 되어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지사는 10월 21일자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처음 실시되는 자율팀장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이 성과를 내는 일을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운영 매뉴얼에 따라 실국별 내부 토론 및 팀장과 대화를 통해 책임자를 배치하고, 모든 부서에서는 팀장에게 업무부여를 통해 역동적이고 일하는 조직문화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통합·신설부서의 사무실 이전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직이관 과정에서 행정공백 및 업무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예산이체·배분, 공문서·기록물 등 데이터베이스 자료 이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17~18일간 실시된 도의회 도정질문답변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회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셨고, 상당 부분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주요 답변에 대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발언 의원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다음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 진행된다"며, "정치권 및 시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실국장 중심으로 국회, 기재부 및 부처 대상으로 전방위적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효과적이고 질서있게 국가예산 확보 국회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 국가예산팀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전라북도서울본부와 상시 협업할 것도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 1인 가구, 1명 단독 생계 유지 생활단위

## 강동화 도의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전북도의회에서도 지원을 강화하는 '전라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동화(더불어민주당·전주8) 의원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1인 가구에 대한 기본 조례 성격인 '전라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통과 후 24일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이 조례안에서 1인 가구는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1인 가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1인 가구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주거지원, 비상벨 설치, 응급상황 대처 범죄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도내 1인가구, 전체 35.1% 도 차원 지원책 마련 미흡"

강동화 의원은 "전북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도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미흡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 복지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원사업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6년 기준 전체 가구 73만4,000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2만2,000가구(30.2%) 2021년 전체 가구 78만5,000가구 중 1인 가구는 약 27만6,000가구(35.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경수 기자

##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

김제시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의와 시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다음달 제2차 정례회에서 활동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기타 6건 등 총 22건으로 심도깊은 논의 끝에 이 중 1건은 의견 채택하고 20건은 원안 가결했고 1건은 수정 가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경기전을 찾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경기전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1일 전주 경기전을 찾은 가운데,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들, 〈관련기사 5면〉

## 고창군의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21일 개회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축소하는 정책을 폐기하라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성만 의원은 "우리 고창군의 공공형 노인일자리도 10%를 줄이면 200여 명의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공공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이 만드는 시장형 일자리를 늘린다면, 7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회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 축소 정책 폐기와 함께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선하고 고령자들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尹정부·여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허위·날조"

## 민주 농해수위 위원들

21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허위와 날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공산화법'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에 대해 마치 나라가 국가재정 부담으로 망할 것같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해수위원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대해 "심각하게 왜곡되고 조작된 보고서인 것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며 "농촌경제연구소는 양곡관리법의 핵심적 내용인 논타작물재배에 대해서는 분석조차 하지 않았고 9월 17일에 작성된 1차 현안분석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었으나 감수과정에서 삭제돼 의도적으로 2030년에 1조 4천억이라는 격리 비용이 든다는 왜곡된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원들은 "정부·여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벼재배에 익숙하고 기계화율이 높아져 쌀 생산량이 늘어나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며 애꿎은 농민을 탓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농경연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연구결과임을 인정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기자

# 공무직·기간제근로자 재취업 지원 근거 마련

## 김희수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행자위 심의 통과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해당 상임위(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20년 5월 1일부터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전라북도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884명으로 법적 의무 사업장은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도내 공무직·기간제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재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정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대상을 이직 예정인 50세 이상 공무직(고용 계속기간 1년) 및 기간제근로자(고용계속기간 3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등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 제공하도록 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직자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퇴직 이후 생애 진로 설계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이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인생 2막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24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경수기자

# "삐걱대는 군산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조속 해결을"

## 한경봉 군산시의원, 5분발언 통해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250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삐걱대고 있는 '군산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명분으로 자본금 100억원을 출자해 2020년 6월에 시민발전㈜를 설립했다.

이후 새만금 산업용지에 군산육상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인 군산육상태양광㈜가 설립됐다.

이 SPC는 시민발전 출자금 50억원을 포함해 발전사와 설계·조달·시공 일괄시행사인 EPC사(군장종합건설 컨소시엄, 성전건설 컨소시엄) 등의 자기자본 254억원과 시중은행 장기 PF 대출금 963억원 등 타인자본 1,014억원을 포함 총 1,26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시는 PF대출금 963억원 가운데 563억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자금으로 조기에 상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시민공모 펀드 참여자에게 연 7%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전설비 진입도로 등에 포설한 제강슬래그의 환경 유해성 논란에 이어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등 불안정한 여건으로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협의가 지연돼 펀드 모집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민공모 펀드 판매가 늦어지면서 PF대출금 963억원에 대한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을 위한 이자 등 올해 1차년도 금융 비용만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뒤, "공모 펀드를 군산 시민 만으로 하겠다는 설계가 잘못됐다.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차별금지 조항 등에 따르면 지역을 제한해 펀드를 모집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발전에 대한 군산시 출자 자체에 대한 위법 소지도 있다고 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만 자본금을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당초 사업 취지였던 주민 소득증대 목적의 시민공모 펀드 발행을 통한 수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현재의 상태만 놓고 보면, 시민발전에 대한 출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다.

또 발전사업 부지 도로의 성토재가 순환 골재였는데 갑자기 세아제강에서 나오는 제강슬래그로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고 금융감독원과의 증권신고서 제출·수리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재만금개발청의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일부 준공조건에 따르면, 해당 SPC는 발전사업 만료 후에도 제강슬래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제강슬래그 50만t을 비롯한 토지정화작업 등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 토양·수질오염, 정화작업과 철거비, 재공사비를 포함하면 비용이 최대 2000억원까지 추정된다"라며 복구비 책임 소재도 따졌다.

한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명분없는 수익사업으로 은행과 발전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군산시의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학생 신체 불균형 질환 예방·관리 지원

## 장연국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학생들의 신체 불균형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의 최종 통과를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연국 의원(비례)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이 지난 19일 상임위인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제395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면서 도내 학생들이 거북목, 척추측만증 등과 같은 불균형 체형 대해 예방과 체계적 관리를 받게 됐다.

장연국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감 및 학교장 책무 규정 사항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수립등에 관한 사항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미디어 접근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의 불균형 체형이 증가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수기자

손 씻기·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